

목어 친일청산 논쟁



“했다! 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반대쪽 주장은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 논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 바로 친일 청산 논쟁이다.

한편에서는 한국 언론계를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시피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업 사주들과 저명한 사회 지도층 집안의 친일 행적을 묻고 계산을 한다. 그런데 그 표적이 되고 있는 대상들이 태도는 분명 “안 했다!”는 아니다. 그 문제 삼는 방식, 정치적 불순한 의도, 거기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소극적 친일에 비하면 그들의 긍정적 기여라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분명 그들이 친일적인 행적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의 친일 행적은 과연 어떠한가. 다른 측면에서의 애국적 행적들을 조명하고 그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 분명히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지도 않은 채,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의 마당으로 문제를 옮겨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느 정도 친일 행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독립 후에도 계속 사회의 기득권층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실제 식민지의 잔재 청산을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가로막았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제 제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두자. 좀 환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회합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 부끄러운 일을 계속 덮으려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부끄러움을 낳게 된다. 회합이 중요한 이 시점에 왜 과거를 들추느냐고 말해선 안된다. 진실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분노의 양극을 가라앉히는 것이 과거 청산과 민족회합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

성태용(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사회 투명성으로 삶의 질 높이자

불자 세상보기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를 살면서 좀 헛갈리는 단어가 여럿 생겼다. ‘준법’이란 단어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준법투쟁’이란 말을 가끔 쓴다. 노조가 법을 지키겠다는데 당국이나 회사, 또는 이용자들로서야 ‘정말 잘됐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혼란만 오니 헛갈릴 수밖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한 것이 되는데, 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야 했던 것일까.

그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운다. 법이 없는가, 한국사회에서 법과 현실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은 법, 현실은 현실. 이렇게 서로 제각각 따로 가다

가 크게 한번 잘못 부딪치면 ‘과당’ ‘큰소리’ 나게 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배워온 것이다.

최근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 고백’ 역시 그런 정치적 ‘준법 현실’을 생각해 한다.

“아니, 김 고문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어?” 이렇게 놀라는 사람은 드물다. 김 고문이 비교적 청렴한 정치인이라 해도 ‘정치자금’이란 오래 그런 것이며, 정치의 현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도 스스로의 불법을 고백한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아니, 어떤 이는 ‘과연 그의 불법 자금이 그게 다였을까?’ ‘혹시 +일과

는?’ 이처럼 순수성을 의심도 한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 가운데 뇌물 의 상납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이 ‘고백’을 두고 호들갑을 떠는 정치인이나 언론을 보며 냉소를 날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조사

서양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말에 불과하다.

돈을 손으로 만져서는 체면이 아니라 ‘선비정신’으로 무장해 있었던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에 보면 뇌물 비리가 3천 건을 넘어 헤아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패방지법’에 해당할, 뇌물방지법 위한 상소문도 수 백건이 발견된다. 구미 선진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아닌 모양으로 외신은 그들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들을 날마다 전해준다.

그럼 ‘세상 다 그런데 뭐’ 하고 눈감고 말아야 할까. 그런 냉소주의가 한 국가의 고질적 부정부패 지수를 계속 올려왔을 것이다.

김근태 씨의 ‘고백’은 이제 씩씩 대로 씩은 그 정치현황 속에서 정화의 물꼬를 열려는 ‘참회적 고백’으로 보



인다. 그런 참회적 고백은 진작부터 있었어야 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 온 것이기도 하다. 물론 고백의 주체가 보다 거물정치인이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부정부패를 씩씩이로 내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사회의 투명성으로 보장된다. 우리는 정치자금에서부터 투명도를 높여 가며 이 사회를 조금씩 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부정부패와 싸우겠다’는 지금의 김근태 씨에게 부처님이라면 ‘팔정도’의 가르침을 내리실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포교비용 조달·운용방안

현 조계종 포교사의 약 70%가 사재를 출연해 포교비용을 충당하는 등 대부분의 포교비용을 포교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이 10일 조계사대웅전에서 개최한 ‘포교비용

미련 방안과 효율적 운영’ 주제의 청담 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포교사들의 직접적인 포교비용에 대한 종단 및 사찰, 단체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교수의 발제문과 임동현, 정병조 포교사의 토론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사찰·포교기관서 예산책정을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포교사들의 월평균 포교비 지출액은 약 16만원 정도로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포교사의 약 70%가 포교활동비를 사재로 출연해 충당한다고 응답했으며, 회원의 회비로 활동하는 포교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포교사’ 채용이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모든 포교사가 유급의 직업포교사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지니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정도의 포교예산의 배정은 포교발전의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교에 대한 종단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체고되어야 하며, 단위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재가 포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포교는 사부대중이 모두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처님이 부촉하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사찰이나 포교기관에서는 포교비용 책정을 위해 연간 예산중 일정액을 할애하거나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신도들의 후원항목에 포교항목을 신설해 매월 정해진 액수를 후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구본사 차원에서는 포교사들의 연수교육이나 재교육 등을 실시해 포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교사 70%가 私財털어 충당

전체적으로 보면 포교사 한 사람이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월평균 적정 활동비가 40여만원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각 단위 사찰에서는 매월 포교사에게 이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포교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포교사 개인의 인력과 노력에만 맡겨진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포교활동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사찰이나 각급 종단의 기관과 단체에

바뀌어야 한다. 포교는 사부대중이 모두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처님이 부촉하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사찰이나 포교기관에서는 포교비용 책정을 위해 연간 예산중 일정액을 할애하거나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신도들의 후원항목에 포교항목을 신설해 매월 정해진 액수를 후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구본사 차원에서는 포교사들의 연수교육이나 재교육 등을 실시해 포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병조(회계사)



‘포교활동 비용의 조달과 효율적 운용방안’을 다룬 말로 환연하면 독립재산제에 기초한 자전적(自轉的) 운용방안 또는, 자립형 재정안정확보책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 가지

있는데, 아직 몇가지 한계성을 안고 있다. 포교사들의 개인 부담금 내용의 비공식화 경향을 비롯해 일회용 종결로 동참의식의 부진 유발, 사후결과에 대한 분석과 홍보의 미비, 계수적, 성과분석적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포교환경의 재조명과 정비를 비롯해 건전한 재정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형 수익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수익사업의 모델은 이로 인한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불자들의 불교

기업형 수익모델 고려해봄직

엄연한 사실은 포교활동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용의 규모도 정비되어야 증대한다는 점이다.

포교사단의 현황 수입은 회비, 유관단체의 지원금, 특별 행사 모인 수입금, 포교사 개인 부담금 등으로 이뤄지고

사람과 전법에 대한 열정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포교사단 중앙운영위 산하에 상설기구로서 연구발전 목적의 기획자문위를 구성해 불교적인 사업들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동현(봉은사 포교연구실장)



포교비용 조달이 포교사 개인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는 것은 종단에서 포교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가지지 못한 채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교사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 즉 포교사의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만은 종단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포교사를 배출한 종단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기금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활동분야별로 소속포교사와 그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일반 불자들이 하여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이 가는 분야 또는 팀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의 관리는 팀별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통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운용은 팀별보다 중앙단위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라도 포교사 제도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종단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단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방법은 포교사단 스스로 포교기금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포

문이다. 포교사들의 활동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은 종단에서 책임지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교사단에서 조성되되, 조성방식은 일반불자들의 포교에 대한 열의를 구체화시키는 대중적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자의 생각

염주 착용

염주는 불자들에게 신심도 높여 주고 불자라는 자부심도 심어준다. 붓다뉴스 설문조사에 참여한 82명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51명이 항상 염주를 지

“항상 지녀” 62%... “자부심” 36%

한다고 답했다. 지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기 위해서(29명, 55%)와 불자라는 자부심으로(19명, 36%)의 순서였다.

반면, 염주를 장식용으로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인기 연예인 불자들이 염주나 만(만)자 목걸이 등으로 코드를 하고 출연하는 추세와 관련해 제기됐던 염주의 장식품화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임연태기자

속리산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청동 정밀 주조
○청동 대불 도금 불사

匠人の魂

장인미술
금불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307번지 TEL : 031-332-2680
경기도 포천군 소울읍 무봉리 534-1 TEL : 031-542-0110

불사문의 011-215-4491

※ 한국 최초 “육성 도금” 기법